

# 중동 긴장에 물가 비상...李, 유류세 인하·추경 검토 지시

경제 위해 국가적 역량 총동원 주문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등 덧붙여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공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 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 중에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완하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

유류세 인하+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중도 정책 판단, 결단의 영역인데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며 “똑같은 재원이면 일률보다는 차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운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자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상생 생태계 조성” ‘절운 선언’ 국힘... 장동혁은 이틀째 침묵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과 간담회  
하청에 동일 성과급 준 한화오션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해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속된 말로 ‘물뽕’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면서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다.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가 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감사드린다.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전체 생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얼마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 많으면 20% 적게는 7~8% 정도까지 떨어진다고”며 “(적은 비율의) 인건비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노동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용 유연성 등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런걸 고려하더라도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발표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절운(絶運·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라, 이후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9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의 의원총회를 마친 후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요구에 반대 ▲당내 통합 ▲헌법 가치 존중 등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송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장 대표도 ‘절운’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40일만에 겨우 떠밀리듯 ‘절운’ 선언을 했다는 지적에서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지방선거를 불과 86일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은, 선거 참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번 결의문으로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을 맞긴 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노선 정리가 선결 과제라며 공천 접수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언급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던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문제다. 장 대표는 여이틀째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별 말 없이 메모만 했다고 한다. 이날도 기자들이 ‘절운’ 관련 입장을 묻자 “(전날)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면서 답을 피했다.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게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거기다 떠밀리듯 ‘절운’을 선언한 상황이라, 장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장 대표는 절운을 거부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의 입장과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 당내 반대에 완전히 밀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를 지지했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곧바로 장 대표에게 ‘절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서예진 기자

## 우원식 “6·3 지선 때 개헌 투표하자”

(국회의장)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 발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하자며,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